

### 평양의 봄

#### 태평로



이용수  
논설위원

북한 김정일은 집권 후 처음으로 경제 실적을 인정한 건 코로나가 창궐하던 2020년 8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였다. 경제 목표들이 ‘심히 미진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이 귀를 의심했다. 북한에서 수령은 ‘무오류의 화신’이다. 잘못,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외부 환경과 간부들을 탓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쓴대도 누워서 침 뱉기다. 관공은 척하기엔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았다. ‘승리자의 축전’ 이어야 할 당대회가 코앞이었다. 밑밥을 깔아야 했다.

전원회의의 두 달 전 전조가 있었다. 김정은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 안건이 ‘평양시민 생활 보장을 위한 당면 문제’였다. 핵심 계층이 모여 사는 ‘혁명수도’에서 심각한 식량·전기·생활품 공급 차질을 빚었다는 뜻이다. 이걸 공개했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이듬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모든 부문에서 엄청난게 미달됐다”는 표현을 썼다. 동요하는 엘리트층과 협약해지는 민심을 다독이려던 어쩔 수 없었다. 부촌이라는 개성에서도 아사자가 쏟아졌다. 회의 때마다 경제난을 자인하며 간부들을 질책하는 게 일상이 됐다.

최근 묘향산에서 정치국 회의를 소집

한 김정은이 “지방 인민들에게 초보적 생활필수품 조달을 못하는 건 심각한 정치 문제”라며 간부들을 향해 “말로 굶판다(때운다)” “결단과 용기가 없다”고 질타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1박 2일간 김정은이 가장 많이 한 말은 ‘지방’이었다. 첫날 22차례, 둘째 날 37차례였다. “지방의 세기적 낙후성” 운운하며 도농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지방’으로 접철된 연설문 행간에 ‘이제 평양은 살 만하니 지방만 살아야 된다’는 내부 선전 의도가 뚜렷했다.

김정은이 믿는 구석은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사업이다. 3년 전 당대 김정은은 치적이라는 ‘평양 뉴타운’ 실상은 뇌물 판치는 비리 북마전 배급 끊길라 전전공공하는 주민들 “봉쇄 끝났는데 핵 때문에 이 모양”

회 때 약속했다. 경제가 나라에 빠져 백지화하다시피 한 ‘5개년 계획’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청년 돌격대와 군인을 총동원해 2022년 송화지구 1만 가구, 2023년 화성지구 1만 가구를 완공했다. 오는 4월 입주를 목표로 화성지구에 추가로 1만 가구를 짓고 있다. 핵무력 고도화에 버금가는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한다. 지방에 가야 할 인력과 자원을 뽕뽕 끌어다 썼다. 평양 민심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다.

정작 주민들은 냉소적이다. ‘평양 뉴타운’은 겉모습만 초고층, 초현대식이다. 제한 송전으로 승강기는 장식품이

돼 70~80층을 걸어 다니고 난방·온수 공급도 엉망이라 옷을 몇 겹씩 꺼입는다. 주거 환경이 나은 ‘로열동’ ‘로열층’은 정권 실세들에게 뒷돈을 낸 사람들 차지다. ‘제대 군인, 과학자, 교수 등에게 우선 배분한다’는 배정 원칙은 진작에 무너졌다. ‘누구에게 얼마를 쥐여 줘야 화성지구 입주증(입주허가권)이 나온다’는 필승 공식이 돌아다닌다. 당서열 10위권 안팎의 군수·경제 담당 정치국 위원 2~3명이 가장 확실하다고 한다. 리선권, 현승철도 수완이 좋은 편이다. 주민들은 “저렇게 받아먹어도 멀쩡한 걸 보니 과연 실세”라고 수군댄다. 이들 눈에 화성지구는 김정은의 치적 이 아니라 북마전이다.

300만 평양 주민 대다수는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는 당·정·군 엘리트와 그 가족들이다. 뉴타운에 실망했다고 돌아서진 않는다. 이들을 김씨 왕조와 3대째 운영 공동체로 묶어주는 핵심 고리는 배급이다. 평양에서 배급제가 작동하는 한 김씨 정권은 유지된다. 요즘 평양에선 국영 상점, 시장에 가도 생활품을 구하기 어렵다. 전기는 걸뺏으면 끊기고 유류 공급도 빠듯하다. 식량 공급만 간신히 이뤄진다. 이마저도 ‘모든 곡물을 평양에 우선 공급하라’는 김정은의 특별 방침 덕분이다. 코로나 봉쇄 당시보다 나아진 게 없다. 모든 게 김정은의 핵 집착 때문임을 주민들도 안다. 그런 김정은 뒤에서 호가호위하는 측근들은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다. 평양의 봄은 아직이다.

#### 김준의 맛과 삶 [176]

### 영암 독천 갈낙탕



오일시장 거리 양쪽으로 음식점이 줄지어 있다. 오일장이 열린다지만 시골 마을에 30여 집이나 되는 식당이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그것도 낙지를 식재료로 특화된 식당이라니 경이롭다. 영암군 확산면 독천리에 위치한 ‘낙지 음식 거리’이다.

독천리는 우시장이 열리는 마을이라 송아지 독(犛)에 그 장소가 하천이라 천(川)이라 했다고 한다. 목포와 순천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가까운 곳이다. 독천리는 영산강 하굿둑이 건설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펄 갯벌을 가진 갯마을이었다. 마을 북쪽은 영산호, 남쪽은 금호호 그리고 앞에는 영암호가 있다. 하굿둑 이전에는 모두 바닷물이 들어오고 강물이 만나는 최고의 하구 갯벌이었다. 특히 펄 갯벌에 서식

하는 송어, 낙지, 쟁둥어, 뽕둥어가 많았다. 영암에 송어알로 만든 어란, 쟁둥어탕, 장어 구이 그리고 갈낙탕이 유명한 이유다. 지금은 세발낙지라하면 무안이나 신안을 떠올리지만, 원조가 독천 낙지라는 데 이견이 없다. 영암 낙지는 가래를 가지고 잡는 빨낙지였다. 이렇게 낙지를 잡아 오일장에 팔고, 목포 상회에 넘겨 생계에 큰 보탬이 되었다.

영산강 하굿둑은 1981년 말 준공되었다. 낙지가 서식하던 갯벌은 농지가 되고 공장도 세워졌다. 낙지 잡이로 생계를 잇던 어민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텃밭처럼 일구던 갯벌을 내줘야 했다. 게다가 1980년대 중반 큰소의 가격이 송아지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 파동’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낙지 서식지는 파괴되고, 우시장이 무너지

면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무렵 한 식당에서 주인이 가져온 낙지를 갈비탕에 넣어 끓였는데, 국물이 시원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갈낙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갈비탕의 녹진한 맛에 낙지가 더해져 개운하고 깊은 맛이 탄생한 것이다. 우시장의 소와 갯벌의 낙지가 지역 경제를 살려낸 것이다. 갈낙탕에 독천 갈낙탕 혹은 영암 갈낙탕이라 이름을 붙이는 이유이다. 갈낙탕 외에도 낙지 연포탕, 낙지 조무침, 낙지 탕탕이, 불고기 낙지 전골 등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생고기와 낙지가 만난 육회 낙지 탕탕이 인기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 社 說

###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의 넘어서는 모범 보여주길

정부가 올해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5058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겠다”고 했다.

의사가 부족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 증원은 불가피하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의사가 부족하면 국민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고, 소아과·외과·응급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지원자가 없어 썰매고 있다. 젊은 부모들이 ‘소아과 오픈런’을 하고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의료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도 분명하다.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지역·필수 의료가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의사들을 지역·필수 의료로 유인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1일 지역·필수 의료 수가 인상에 10조원 이상 투입, 일정 기간 지방에서 근무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의사들이 지방과 필수 의료 분야로 올 수 있도록 이 분야 수가를 올리고, 현재 의사들이 몰리는 미용·성형 등 분야는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

로 가야 한다. 지금 미용·성형 등으로 의사가 쏠리는 현상은 복지부가 그동안 이 같은 조정을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이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 단체들은 파업을 예고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은 누구보다 현장 의사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의사가 더 필요한 것이 명백하고 국민 거의 모두가 원하는데, 앞으로 돈벌이에 지장 있을까 봐 의사들이 치료를 안 하고 파업한다는 것은 ‘환자 치료’라는 숭고한 직업 정신에 먹칠하는 것이다. 유럽 의사들은 “의사를 늘린다는데 의사들이 환영하지 않고 왜 반대하느냐”고 묻는다고 한다.

정부는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벌이면 업무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의사는 우리 사회 최고의 지식인이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직업보다 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 반대로 국민 고통을 다는 데 정부보다 먼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면 된다.

이번 의대 증원으로 최상위권이 진화하는 학과 정원이 한 번에 2000명 늘어난다. 입시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대 자연계열 입학생 수(1997명)와 비슷한 숫자다. 서울대·카이스트 등 최상위권 대학의 공학·과학 계열에서 자퇴해 의대에 다시 도전하는 ‘N수생’이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회를 위해서도 학생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도를 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 ‘뺏다방’ 위성 정당 난립, 50cm 넘는 투표용지 나올 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 대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뺏다방’ 식 정당 난립이 재현될 전망이다. 과거 병립형제로 총선을 치렀을 때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은 2012년 3개, 2016년 4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준연동형제가 도입된 2020년엔 비례 전 문당이 20개로 급증했다. 당시 급조된 정당이 많아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48cm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50cm가 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는 양대 정당에서 탈당했거나 야당에서 공천받기 어려운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비례 정당 창당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을 만들었다. 검찰 무마 및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리셋코리아행동’을 만들었는데 지역구 당선이 여의치 않을 경우 비례대표 정당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들도 민주당이 제안한 범야 위성정당에서 확실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독자 행동에 나설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 술한 논란을 일으킨 ‘윤미향·김의겸·최갑욱’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선거 때 의석만을 노리고 뺏다방식으로 뭉쳤다가 해산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아바위에 가깝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위성정당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75명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5일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총회는 만장일치로 이를 추진했다. 최소한의 염지도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 ‘사법 농단’ 의혹 키우더니 몰라라 하는 ‘김명수 키즈’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관 1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났는데 이 사건의 두 가지 핵심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사실상 사건의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 1심 재판부도 ‘사법 농단 의혹 대부분은 실체가 사라진 채 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만 남게 됐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8개 혐의는 통째로 무죄가 선고됐고, 그 밑에서 사법행정 실무 담당인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부를 들쭉시키고 5년간 광전적 고위 법관들을 형사 피고인으로 몰아 맨 결과가 이렇다.

그 책임은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에

호응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 검찰에 있다. 하지만 최초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해 평지풍파를 시킨 사람들은 인권법·우리법 출신 판사들이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장한 이탄희 판사,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이수진 판사, 전국법관대회에서 “재판 거래 의혹은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한 최기상 판사, 법원계시판에 사법 농단 진상 조사를 청원하는 글을 올린 김형연 판사가 그들이다. 이른바 ‘김명수 키즈’로 불리는 이들이 확실치도 않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이탄희·이수진·최기상 판사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고, 김형연 판사는 문재인 비서에 이어 법제처장까지 지냈다. 겉으로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림을 짓밟은 것이다. 이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고통을 당했고, 법원도 망가졌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과 한마디 없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참으로 파렴치하다.

동영상 시청

## 이재명의 말할랄 피 거꾸로 치솟게 한다... 정말 낮 두껍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답하라**

① 6.25는 남침, 북침, 남침 유도, 자연발발?  
② 당신은 잡범인가? 사상범인가?  
③ 당신은 염치와 체면 갖고 있나?

**이런 걸 말 따위라고 하고 앉았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묻는다.**

1. 그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6.25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슨 소리인가? 누가 먼저 도발했다는 것인가?

◎ 영터리 커밍스, 또 나타났다

이재명의 말은 부르스 커밍스가 주장했던 [수정주 6.25판]을 연상케 한다. 그는 남침설도 북침설도 부정했다. 6.25는 1930년대부터 시작된 한민족 내부의 좌우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는 소리였다. 남침이나 북침이나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소련이 붕괴하고 크렘린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6.25는 [북·중·러의 남침]이었음이 세계적으로 공인되었다.

**그런데 뭐?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것?”**

그리고 뭐?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전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 변?

이걸 말 따위라고 하고 앉았나? 남쪽이 전쟁 게임을? 북쪽 김정은이 아니고? 듣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분명히 확인하라. 어느 쪽인가? 남침인가, 북침인가, 남침 유도설인가? 누가 먼저 일으켰느냐는 무의미한가?

이건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가 정체성☆역사의 진실 ☆국민의식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다.

2. 이재명 대표는 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운동권 청산’ 주장에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독재의 [죽임의 정치]’라 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그는 지금 무엇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가?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같은 것들, 아닌가? 이걸 파렴치 혐의들이다.

◎ 파렴치범 혐의자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이를 두고 “중대범죄 혐의자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확인하라. 이 말은 맞았나, 틀렸나? 중대범죄 혐의자를 소추하는 것이 [죽이는 짓인가? 그런 식이라면 전국 교도소도 당장 비워야 하겠네?

◎ 지역구도 먹고, 비례대표도 먹고

3.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천벌 받을 짓은 번번이 당원 투표로 한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체포동의안 표결 땀 부걸때 달라 호소했다. 이번에 또 뒤집으면, 똥으로 매주를 쓴대도 누가 그를 믿겠나?”라고 물었다.

이재명은 답하라.

선거법 같은 중요 법안을 이재명 혼자에게 맡기는 정당을 일국의 공당(公黨)이라 할 수 있나? 그런 이재명 개인의 방편(防辯) 사당(私黨) 아닌가? 그에겐 염치와 체면이라는 게 있거나 한가? 어떻게 그렇게도 후흑(厚黑, 두껍고도 시커먼) 철학인가?

창피를 알아야 한다. 수치심을 [몰라서 용감한] 이재명을 떠받드는 팬덤 광풍도 한심하다.

◎ 도둑떼·산적 정치 시대

한국인들의 과제는 산업화·민주화·선진화였다. 오늘의 과제는 무엇인가?

문명화다. 586이 불러온 ★도둑떼 정치(kleptocracy) ★산적(山賊) 정치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이영송 칼럼 <김씨 조선> | 류근일 칼럼 <탄핵집단의 상부상조>

‘영부인 몰카’에 대한 국힘 감응의원 주장은 영터리 | 이준석 대신 유승민 따우는 언론들... 한동훈 뜻인가?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2월 5일 게재 되었습니다.